

産災 저감 - '제 살 깎기 경쟁' 억제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관건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산재의 주원인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산업 안전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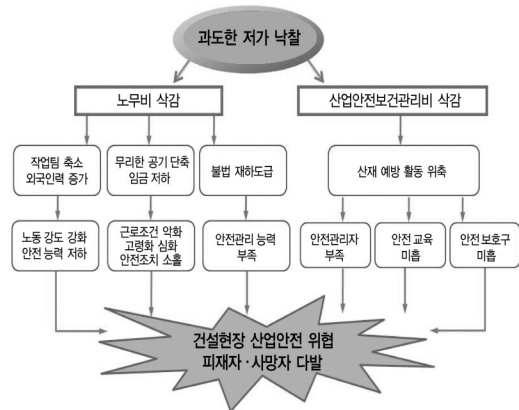
건 설 현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직·개별 사업장 중심의 제도와 비정규직·개별 사업장 밖 건설 근로자의 현실 간 괴리, 동시에 다수의 사업주 공존, 고령화된 내국인과 다수의 외국인, 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감독 부재 등. 이러한 분석이 제각각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공사비 부족'을 생각할 수 있다.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산재 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대체로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기 단축 및 저임금 불법 취업자 고용 ⇒ 노동 강도 강화 및 산업 안전 소홀 ⇒ 산재 다발'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사비 부족을 낳는 과도한 저가 수주가 위험한 이유이다.

현장 실무자들과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삭감된 노무비를 만회하기 위한 노동력 투입 관행은 크게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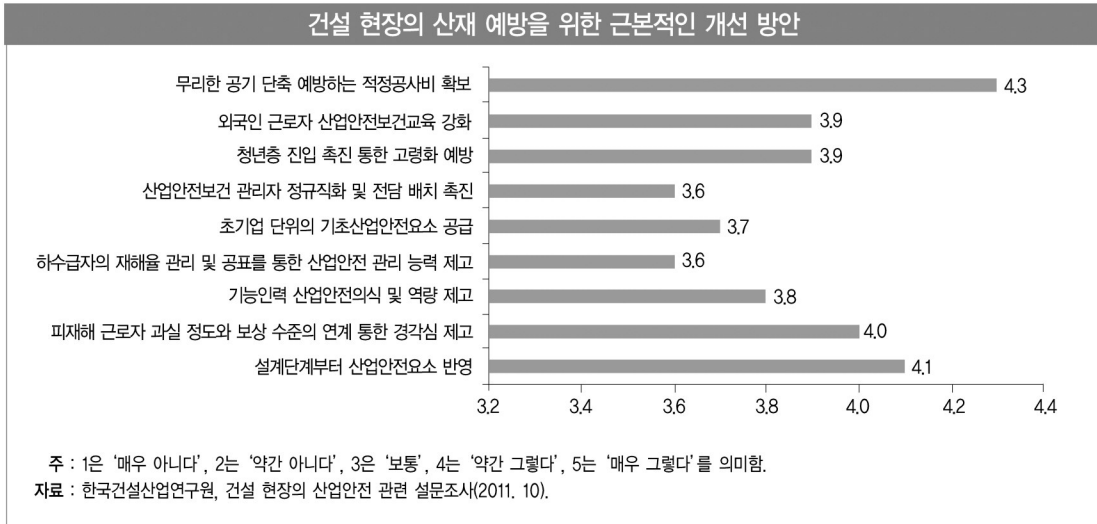
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작업팀을 감축한다. 예컨대, 통상 10명인 작업팀을 7~8명으로 축소한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를 투입한다. 고임금의 A급 대신 중·저임금의 B급을 투입한다. 셋째, 내국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한다. 즉, 고임금의 내국 인력 대신 저임금의 외국 인력을 투입한다. 이것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

공사비 부족이 건설현장 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심규범, 저가 낙찰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건설공사
입찰제도 관련 건설안전보건 토론회(강성천 의원실), 2011. 9. 7 참조.

특집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와 적정 공사비



자들에게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숙련도가 낮고 의사소통이 더딘 외국 인력들에게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공사비 부족은 무리한 공기 단축 및 근로 조건 악화를 거쳐 산재 다발로 귀결된다. 건설 생산 과정에서는 하루에 투입되는 요소가 모두 비용으로 연결되므로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 강화, 청년층 진입 기피, 고령화 등으로 표출된다. 공사비 부족은 직접 시공을 어렵게 해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산재 발생으로 이어진다.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팀·반장의 안전관리 능력은 더욱 부족하고 작업 과정이 원수급자의 통제 및 감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산재 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한편, 저가 낙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부족하게 만드는데 이때 현장의 산재 예방 활동이 위축된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부족, 안전 교육 미흡, 안전 시설 및 보호구 공급 미흡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 조사(2011) 결과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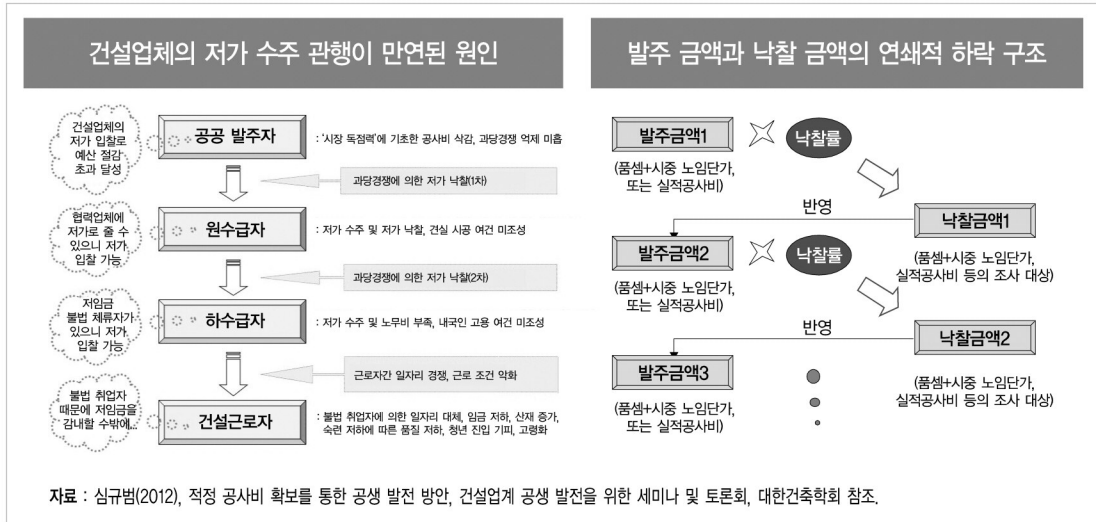
하면 건설 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중 일반건설업체의 긍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하는 적정 공사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건설현장 산재의 주된 원인이 공사비 부족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사비 부족의 주원인 :

'제 살 깎기 경쟁', 임금 삭감 경쟁

그렇다면 공사비는 왜 부족해지는가? 건설산업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주 생산 방식의 맹점인 입찰자간의 '제 살 깎기 경쟁'에 있다. 발주자가 발주 금액을 삭감하는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특히, 최저낙찰제 하에서 입찰자는 스스로 발주 금액 삭감분 이하의 금액을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급 단계마다 자행되고 있는데,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는 원수급자의 저가 입찰을 믿고 저가 발주하고,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의 저가 입찰을 믿



고 저가로 수주한다. 하수급자는 저임금 불법 취업자를 받고 저가로 수주한다. 근로자들은 취업을 위해 저임금을 감내하는데 특히, 불법 취업자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체불 또는 부분(임금을 떼이는 것)마저 감내해야 한다.

결국 공사비 부족을 낳은 모든 '제 살 깎기 경쟁'의 진원지는 바로 근로자간의 임금 삭감 경쟁이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저가로 수주된 금액에서 비롯된 저임금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반영된 품셈과 실적 공사비가 다시 발주 금액의 기준이 되어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의 틀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며, 여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근본 대책 : 임금 삭감 경쟁 억제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 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를 갖춘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을 고용하여 적정 규모의 팀을 꾸리며, 추락 방지 등

안전 설비를 갖춘 후 시공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합리한 제 살 깎기 경쟁의 진원지로부터 각 당사자가 저가를 제시하려고 해도 도저히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두는 데 있다. 이때 원수급자의 노무비 낙찰률에 하한선을 갖는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불투명하다. 하수급자에 대한 저가 낙찰을 막을 수 없어 여전히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임금 불법 취업자의 고용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하수급자의 노무비 낙찰률에 하한선을 규정해도 이들이 저임금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급 단계 말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규제함으로써 진원지로부터 모든 단계의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이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여건을 조성해 주어, 다양한 산재 예방 노력이 산재 저감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기본 토대가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CERIK